

소규모 개발행위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기반 기후인지 행정 모델 개발

이소영*

*충북연구원

e-mail:sylee@cri.re.kr

Development of a Climate-Aware Administrative Model Based on the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from Small-Scale Development Activities

Soyoung Le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지방정부 인허가 행정의 시각지대인 소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기후인지 사전심사청구제'의 실행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대규모 사업에 국한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기반의 사전심사 절차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설계하였다. 체천시 민원 데이터 실증 분석 결과, 건축 민원이 전체의 66.7%를 차지하며 소규모 사업에서도 상당한 누적 배출(Scope 3 비중 85% 이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 디지털 산정 플랫폼, 인센티브 체계를 결합한 지역 주도형 기후행정 모델을 도출하였다.

1. 서론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속에 국가 차원의 기후 정책은 강화되고 있으나, 지방 행정의 최일선인 소규모 개발 인허가 단계에서는 기후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사업들의 누적적 배출은 지역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저해 요인이다. 본 연구는 민원인이 정식 신청 전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전심사청구제'에 기후인지 기능을 결합하여, 행정 초기 단계부터 능동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2. 기후인지 행정 모델의 설계 및 추진 전략

실증 분석 결과, 소규모 건축 및 개발행위는 자재 생산과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배출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4대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기반 및 자치법규 정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활용하여 '기후인지 사전심사청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민원 처리 절차 내에 기후 영향 검토 단계를 공식화하여 법적·행정적 수용성을 확보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정량적 산정 체계 구축이다. 민원인이 입력

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저장 손실량을 자동 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배출 수치와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셋째, 부서 간 협업 및 전문적 환류 체계 정립이다. 인허가 부서와 기후 부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연계된 거버넌스를 통해 전문적인 '기후인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에 아닌, 사업의 기후 친화적 개선을 돕는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연계이다. 저탄소 자재 사용이나 에너지 효율화 설계를 수용한 사업자에게 인허가 우선 처리, 지방세 감면, 녹색금융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행정 절차의 큰 변동 없이도 소규모 개발행위의 누적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다. 이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기후 책무를 분담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초가 되며, 향후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